

통신서비스

‘100 대 국정과제’ 속 통신비 인하 대책

● 통신서비스

Analyst 정지수
02. 6098-6681
jisoo.jeong@meritz.co.kr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담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공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00대 국정과제’를 담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 세부 실천 전략으로 5대 국정 목표와 20대 국정 운영 전략, 100대 국정 과제가 제시됐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폭넓게 반영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통신비 인하 대책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목표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를 펼친다는 전략하에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을 국정과제로 제시. 이 중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적시된 주요내용은,

- 1)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 월 11,000원 신규 감면, 저소득층 월 11,000원 추가 감면,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 2)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구축,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 등 추진
- 3)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 고가 단말기 가격 투명화 유도, 위법행위 조사·시정 등을 통해 통신시장 투명화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지난 6월 22일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통신비 인하 대책에 포함됐던 ‘보편 요금제 도입’이 누락된 부분. 단기 과제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통신비 인하 대책에서 중장기 과제인 보편 요금제는 제외됐다고 볼 수도 있으나, 정부 역시 통신비 인하 강행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판단.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책 시행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것 또한 사실

시사점

보편 요금제를 제외한 사회 취약계층 기본료 폐지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두 가지 대책만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통신비 절감 금액은 2018년 기준 7,825억원(감면 혜택 신청률 고려 시 사회 취약계층 기본료 폐지 효과 1,303억원,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효과 6,522억원)으로 추정되며 대책 시행 시 통신사 수익성 감소는 불가피. 다만, 통신비 인하 대책과 관련된 세부 내용 변경 및 통신사들의 집단 소송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대책 시행 확정 후 대응 바람직하다는 판단

그림1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 체계

목표	전략	국정과제 (주관부처)	목표	전략	국정과제 (주관부처)						
국민이 주인인 정부 (1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 1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법무부)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권익위·법무부)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자부) 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방통위) ■ 전략 2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행자부)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법무부·행자부·인권위)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국조실) ■ 전략 3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행자부)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10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외교부)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보훈처)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기재부) ■ 전략 4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법무부·경찰청·감사원·국정원)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 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 국민을 위한 권리기관 개혁 (법무부·경찰청·감사원·국정원) 2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 3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고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부)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교육부)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교육부)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여가부)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부) ■ 전략 3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계 구축 (안전처)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안전처)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환경부·식약처)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산업부·원안위)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건설한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수부) ■ 전략 4 :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부)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고용부)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여가부)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가부) ■ 전략 5 :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체부)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문체부)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체부)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방통위)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고용부)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문체부)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문체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2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 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 18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부)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재부)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위)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금융위) ■ 전략 2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위)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강화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공정위)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재부)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중기청) ■ 전략 3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기청)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위)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국조실) 31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국토부·미래부)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국토부) ■ 전략 4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미래부)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산업부·미래부·국토부)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미래부)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미래부)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산업부)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산업부) ■ 전략 5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기청)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중기청) 41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 18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부)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재부)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위)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금융위)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위)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강화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공정위)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재부)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중기청)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기청)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위)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국조실) 31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국토부·미래부)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국토부)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미래부)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산업부·미래부·국토부)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미래부)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미래부)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산업부)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산업부)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기청)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중기청) 41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체부)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문체부)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체부)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방통위)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고용부)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문체부)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문체부) ■ 전략 1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ol style="list-style-type: none">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행자부)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행자부·기재부)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교육부) 77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행자부) ■ 전략 2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ol style="list-style-type: none">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산업부·국토부·행자부)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국토부) 80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해수부) ■ 전략 3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ol style="list-style-type: none">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식품부) 82 농어업인 소득안정망의 촘촘한 확충 (농식품부)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농식품부)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해수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 1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복지부)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복지부)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복지부)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부)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국토부)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국토부) ■ 전략 2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ol style="list-style-type: none">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복지부)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복지부)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복지부)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부)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국토부)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국토부)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외 증진 (외교부) 97 주변 4국과의 다양한 협력외교 추진 (외교부)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외교부)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교부)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산업부)

자료: 청와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7월 20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을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7월 20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을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7월 20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정지수)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